

22대 첫 정기국회 개막

與 “민생법안 처리 촉구”... 野, ‘부자감세’ 수정 등 尹 견제

AI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국민 생명·안전 위한 법안 논의
채 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공방 전망

22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국정 감사·예산 심사 등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연다.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규택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 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하며 민생을 위한 협치에 몰

꼬를 뒀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AI(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페덱스 방지 및 처벌법, 건축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해소법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방을 이어온 ‘채 해병 특검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해 여전히 지뢰밭을 걷는 분위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야당에 “제22대 첫 정기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제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거대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위헌적인 청문회로 정쟁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

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170건의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 부분을 수정해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에 힘을 주고 165개의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식 참석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행사 불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제25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

2024.9.12.-15.

함평군 해보면 꽃무릇공원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산림청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 KORAIL 함평도 해보면면협의회

尹, 중소기업 개각 마무리하고 ‘민생·4+1 개혁·소통’ 집중

尹 “한덕수 중심 내각체제 유지”
집권 중반, 개혁 이행 성과 ‘총력’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마무리하고 민생 현안과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오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나, 이번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이 교체되며 중소기업 개각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정기국회 및 예산 처리 시기에 추가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4+1 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짚었고, 집권 중반인 만큼 개혁 이행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안정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 연금개혁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합의엔 실패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때문에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금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또 최근 논란인 의료개혁은 대통령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응급실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응급실 대란을 대비해 ‘응급실 특별 대책’도 살필 예정이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증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부터 7월18일까지 총 27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고, 전국 곳곳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았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품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언론·대국민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기자회견을 분기별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이후 ‘4+1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들도 직접 국민에게 개혁 과제 내용과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